국민권익위원회

국민권익위
빅데이터로 분석한

국민의 소리

2023년 3월 (제711호)

▶ 전월 대비 23.8% 증가(1,155,571건)

▶ 국민권익위, 충청북도, 경북 울릉군, 인천교육청, 금융감독원 등이 전월 대비 증가

▶ 코로나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'예비군 소집훈련'이 4월부터 재개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개선요구, 훈련급식 부실에 따른 불만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4월의 관심키워드로 '예비군 훈련' 선정

▶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

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

국민의 소리

No. 711 | 월간 동향 | 2023년 3월

01 민원 동향 1

민원 추이 / 신청인 현황 / 지역별 현황
분야별 현황 / 주요 민원키워드

02 기관별 동향 5

중앙행정기관 / 지방자치단체 / 교육청 / 공공기관등

03 4월의 관심키워드 : 예비군 훈련 10

04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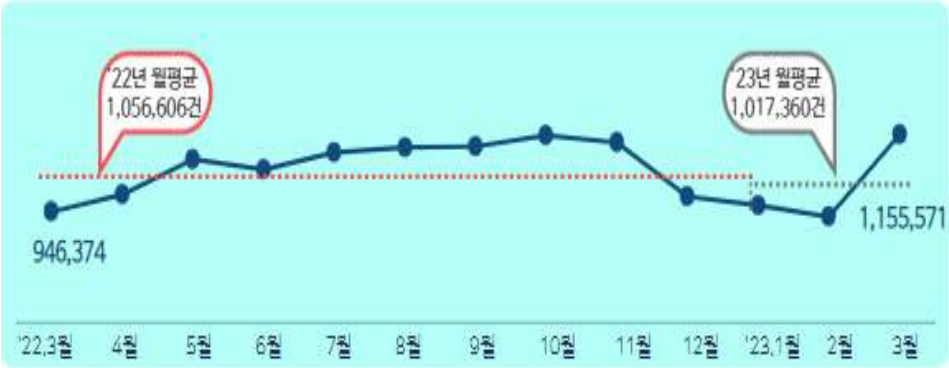
빅데이터로 보는「국민의 소리」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'국민신문고' 등에 접수된 민원, 제안,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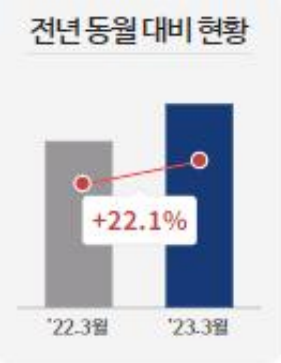
01 민원 동향

민원 추이

2023년 3월 민원 발생량은 **총 1,155,571건**

전월(933,590건) 대비 **23.8% 증가, 전년 동월**(946,374건) 대비 **22.1% 증가**





※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(시도포털, 새올)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('23.4.3. 10시)

신청인 현황

연령별로는 **40대**(38.5%) 및 **30대**(23.8%), 성별로는 **남성**(66.1%)이 다수를 차지

연령 및 성별은 **40대 남성**(20.5%), **40대 여성**(18.0%), **30대 남성**(17.0%) 등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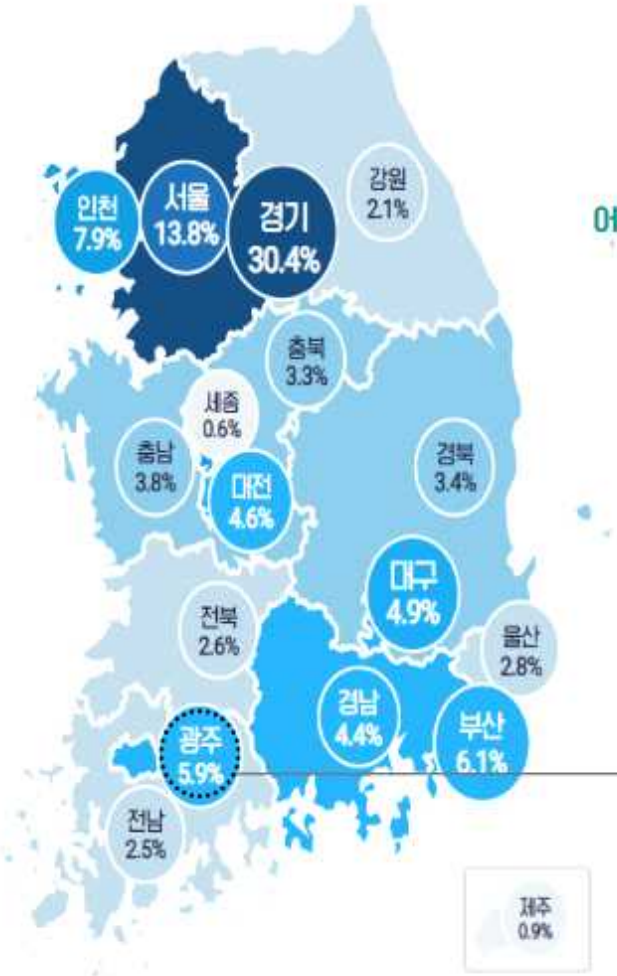
※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33,986건 대상

지역별 현황

경기 30.4%(293,345건), **서울 13.8%**(133,263건), **인천 7.9%**(76,579건), 부산 6.1%(58,530건), 광주 5.9%(57,377건) 등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2.1% 차지

재개발 공사 관련 내진·면진 설계적용 요청 등 **광주광역시**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(85.7%↑), 광주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서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(28,570건)

3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



광주광역시 주요 민원키워드

광주광역시 민원발생 현황

※ 신청지역이 확인된 964,863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

분야별 현황

분야별로는 **교통 분야***(58.0%)가 가장 많고, 도로(7.1%), 행정안전(7.0%), 환경(3.5%), 주택건축(2.5%), 경찰·검찰·법원(2.1%), 산업통상(2.1%) 분야 등의 순

*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

교통	도로	행정안전	환경	주택건축	경찰·검찰·법원	산업통상	보건
58.0%	7.1%	7.0%	3.5%	2.5%	2.1%	2.1%	1.4%

문화	교육	수자원	재정	방송통신	국방	노동	농림축산
1.3%	1.1%	1.0%	0.8%	0.8%	0.8%	0.8%	0.7%

도시	과학기술	체육	복지	세무	관광	해양수산	외무통일	우정
0.6%	0.5%	0.5%	0.5%	0.5%	0.4%	0.3%	0.2%	0.2%

※ 분야 정보가 확인된 1,155,571건 대상

증감률 상위 분야

증가순

검단신도시 체육공원내 계획된 체육관 건립 진행촉구, ○○도청 펜싱팀 지도자 채용 관련 이의제기 등 **체육** 분야 증가

체육	관광	경찰검찰법원	농림축산	수자원
32.0% ↑	30.5% ↑	28.9% ↑	28.6% ↑	26.7% ↑

감소순

방송통신	과학기술	복지	교육	세무
4.1% ↓	7.1% ↑	9.7% ↑	9.7% ↑	12.3% ↑

주요 민원키워드

3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수도권 GTX 확충, 제2경인선 원안추진, 지하철 연장, 영통 소각장 대보수 반대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

〈일반〉

순위	키워드
1	영흥공원 폐기물
2	**불법광고물(전단지, 현수막)**
3	영통 소각장 패쇄
4	**코스닥 상장사**
5	**부출입구 개설**
6	**번호판 오염·훼손**
7	**거제2구역 재개발**
8	시흥 과밀학급 해소
9	위례 경관개선사업
10	**수당차별 시정**

〈도로교통〉

순위	키워드
1	불법주정차 등
2	제2경인선 원안추진
3	**통학대책 요구(덕은)**
4	미디어밸리 지구
5	지하철 혼잡률
6	인천서구 GTX역
7	GTX 갈매역 정차
8	정차역 환승센터 신설
9	위례신사선 조기개통
10	항동역 조기착공

※ 불법주정차, 중앙선 침범, 과태료 처분 등 교통법규 위반신고 등은 '불법주정차 등' 키워드에 포함

[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]

일반 ① 수원 아파트 영흥공원 폐기물 관련 보상 요구 ③ 수원영통 노후 소각장 대보수 반대 ④ 주가 부풀린 모 기업대표 처벌요구 ⑤ 수원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요청 ⑦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비리 시정요구 ⑨ 위례중앙로 경관 개선사업(위례상징물 포함) ⑩ 영어회화강사 수당 등 처우개선 요구

도로교통 ③ 고양 덕은지구내 학생들의 통학대책 요구 ④ 대장-홍대선역 덕은미디어밸리 지구내 설치요구 ⑤ 김포·검단 5호선 연장 요구 ⑥ 인천서구 GTX역 선정요구 ⑧ 고양 덕은·향동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정차역 신설 ⑨ 위례신사선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촉구 ⑩ 경의중앙선 항동역 조기 착공 요구

02 기관별 동향[1)]

중앙행정기관

3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**총 258,366건**으로 **전월 대비 37.0% 증가**

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국민권익위, 국토부 등, 감소한 기관은 기재부, 해수부 등

[발생량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3.2월	'23.3월	증감률
경찰청	102,448	127,966	24.9%
국토부	18,779	34,315	**82.7%**
국민권익위	3,988	24,952	**525.7%**
고용부	8,894	9,478	6.6%
국방부	6,504	8,258	27.0%
식약처	4,882	5,670	16.1%
대검찰청	4,485	5,486	22.3%
행안부	3,244	3,250	0.2%
복지부	2,704	3,099	14.6%
과기정통부	2,634	3,001	13.9%
환경부	2,184	2,511	15.0%
법무부	2,042	2,498	22.3%
국세청	2,189	2,497	14.1%
해수부	2,737	2,347	-14.2%
공정위	1,574	1,781	13.2%

[증가율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3.2월	'23.3월	증감률
국민권익위	3,988	24,952	**525.7%**
국토부	18,779	34,315	**82.7%**
국가보훈처	608	941	**54.8%**
관세청	933	1,421	52.3%
중소기업부	228	322	41.2%
법제처	150	210	40.0%
산림청	601	819	36.3%
국가인권위	373	483	29.5%
국방부	6,504	8,258	27.0%
농림축산부	1,262	1,577	25.0%
경찰청	102,448	127,966	24.9%
법무부	2,042	2,498	22.3%
대검찰청	4,485	5,486	22.3%
병무청	784	952	21.4%
외교부	1,057	1,271	20.2%

※ 3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

[주요 민원 증가 사례]

국민권익위	농협 은행원(○○○)이 문서를 위조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하고 있으니 억울함이 없도록 밝혀달라는 민원제기(687건), 요지불명(…)민원(20,008건) 등
국토부	김포·검단 5호선 연장 요구(7,411건), 인천서구 GTX역 선정요구(4,430건), GTX 갈매역(경기도 구리) 정차 요구(1,959건) 등
국가보훈처	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유공자 자녀에게 승계해 주고, 미망인에게도 의료비(병원비)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제기(237건) 등

2) '23.4.3.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,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

지방자치단체(광역)

3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**총 85,628건**으로 **전월 대비 3.2% 증가**

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·도는 충북, 광주, 전남, 충남 등 16개 기관, 감소한 시·도는 대구 1개 기관

[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]

기관명	'23.2월	'23.3월	증감률	기관명	'23.2월	'23.3월	증감률
서울	61,355	62,558	2.0%	충남	381	502	31.8%
대전	4,509	5,624	24.7%	제주	444	469	5.6%
세종	3,123	3,571	14.3%	**충북**	257	378	**47.1%**
경기	3,378	3,452	2.2%	경북	296	377	27.4%
인천	1,754	2,135	21.7%	**전남**	277	370	**33.6%**
대구	3,596	1,831	-49.1%	경남	293	363	23.9%
광주	1,117	1,559	**39.6%**	강원	282	345	22.3%
부산	1,023	1,084	6.0%	전북	184	237	28.8%
울산	721	773	7.2%				

※ 3월 민원발생량 순

[주요 민원 증가 사례]

충청북도	보도자료에 쓰인 '인프라'를 우리말인 '기반시설'로 변경요청(23건) 등
광주광역시	△△지구 ◎◎아파트 지하1층 계단과 승강기 출입구를 폐쇄한 ○부소방서에 대한 감사요청(174건), 포트홀 및 파손된 도로의 신속 정비요청(177건) 등
전라남도	광양시 황금지구 주택단지 인근 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민원(58건) 등

[분야별 현황]

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**교통**, 김포·검단 5호선 연장 요구 등 **도로** 분야가 많이 발생

① 교통(58.0%)

② 도로(7.1%)

③ 행정안전(7.0%)

④ 환경(3.5%)

⑤ 주택건축(2.5%)

지방자치단체(기초)

3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**총 761,846건**으로 **전월 대비 23.6% 증가**

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북 울릉군 등, 감소한 기관은 경기 고양시 등

[발생량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3.2월	'23.3월	증감률
경기 수원시	23,813	30,775	29.2%
서울 서초구	11,556	23,943	**107.2%**
충북 청주시	13,306	17,650	32.6%
경기 고양시	16,121	15,973	-0.9%
경기 성남시	13,057	15,465	18.4%
경기 화성시	11,695	14,662	25.4%
서울 영등포구	9,542	14,441	**51.3%**
서울 강서구	11,834	12,409	4.9%
충남 천안시	9,778	12,308	25.9%
경남 창원시	10,732	12,146	13.2%
서울 관악구	11,382	12,113	6.4%
경기 용인시	9,020	11,324	25.5%
경기 평택시	10,240	11,165	9.0%
대전 서구	9,352	10,966	17.3%
서울 마포구	9,490	10,964	15.5%

[증가율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3.2월	'23.3월	증감률
경북 울릉군	21	101	**381.0%**
경남 의령군	46	147	219.6%
부산 연제구	1,764	5,023	184.8%
전북 순창군	48	109	127.1%
서울 서초구	11,556	23,943	107.2%
충남 태안군	313	643	102.6%
전북 장수군	55	107	94.5%
서울 광진구	5,139	9,718	89.1%
경남 합천군	94	177	88.3%
전북 진안군	181	336	85.6%
경기 파주시	3,236	5,915	82.8%
경남 함양군	137	248	81.0%
경남 거창군	246	444	80.5%
경기 하남시	2,872	5,173	80.1%
경기 양평군	731	1,268	73.5%

※ 3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

[주요 민원 증가 사례]

서울 서초구	남부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내 5번출구 앞 다수의 택시들로 교통정체가 심하니 해결요청(10,989건), □□안과 등 의료법위반 게시물신고(218건) 등
서울 영등포구	차량 및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에 대한 오염·훼손 제보(1,761건) 등
경북 울릉군	등산로 안전펜스, 인명구조 보관함 보수요청(18건), 불법주정차(6건→44건) 등

교육청

3월 교육청 민원은 **총 11,084건**으로 **전월 대비 13.5% 증가**

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인천, 전남, 충북, 제주 등 16개 기관,
감소한 교육청은 경기 1개 기관

[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]

기관명	'23.2월	'23.3월	증감률	기관명	'23.2월	'23.3월	증감률
경기	5,872	5,046	-14.1%	**전남**	135	281	**108.1%**
서울	1,117	1,265	13.2%	충남	161	259	60.9%
인천	282	855	**203.2%**	광주	148	245	65.5%
부산	363	469	29.2%	강원	137	224	63.5%
대전	284	453	59.5%	전북	125	205	64.0%
경남	314	383	22.0%	울산	112	170	51.8%
대구	213	370	73.7%	세종	80	134	67.5%
충북	151	305	**102.0%**	제주	69	132	91.3%
경북	205	288	40.5%				

※ 3월 민원발생량 순

[주요 민원 증가 사례]

인천교육청 △△지역 초등학교·중학교의 학생수가 교육청 기준(14.2명)보다 과밀에 해당되어 학교신설 등 대책마련 요구(429건) 등

전남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각종 수당 등 처우개선 요구(92건) 등

충북교육청 ▽▽초등학교 교실부족에 따른 증축 및 임시교실 설치요청(13건),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각종 수당 등 처우개선 요구(87건) 등

공공기관등

3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**총 38,610건**으로 **전월 대비 7.6% 증가**

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기관은 금융감독원 등, 감소한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

[발생량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3.2월	'23.3월	증감률
한국토지주택공사	5,329	5,024	-5.7%
금융감독원	3,345	4,472	33.7%
법원행정처	1,643	3,918	**138.5%**
한국전력공사	1,562	2,088	**33.7%**
게임물관리위원회	2,411	1,714	-28.9%
한국소비자원	1,547	1,591	2.8%
한국도로공사	1,629	1,518	-6.8%
한국산업인력공단	799	1,115	**39.5%**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1,098	1,111	1.2%
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	947	1,083	14.4%
대한법률구조공단	751	789	5.1%
한국철도공사	608	744	22.4%
국가철도공단	684	720	5.3%
국민건강보험공단	586	646	10.2%
건강보험심사평가원	521	630	20.9%

[증가율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3.2월	'23.3월	증감률
법원행정처	1,643	3,918	**138.5%**
인천도시공사	69	151	118.8%
국방과학연구소	85	180	111.8%
한국수자원공사	80	163	103.8%
화성도시공사	62	107	72.6%
국립공원공단	79	120	51.9%
한국산업인력공단	799	1,115	39.5%
한국농어촌공사	272	374	37.5%
한국지식재산보호원	163	220	35.0%
부천도시공사	145	195	34.5%
금융감독원	3,345	4,472	33.7%
한국전력공사	1,562	2,088	33.7%
한국환경공단	146	188	28.8%
근로복지공단	248	304	22.6%
한국철도공사	608	744	22.4%

※ 3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

[주요 민원 증가 사례]

법원행정처	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벌 및 소액주주 피해보상 요청(1,611건) 등
한국산업인력공단	공인중개사 자격증 발송요청(40건),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문의(60건), 각종 자격증 시험 관련 문의(239건) 등
한국전력공사	광명로 등 지중화 공사 촉구(87건), 전신주에 까치집 제거요청(302건)

03 4월의 관심키워드 : 예비군 훈련

민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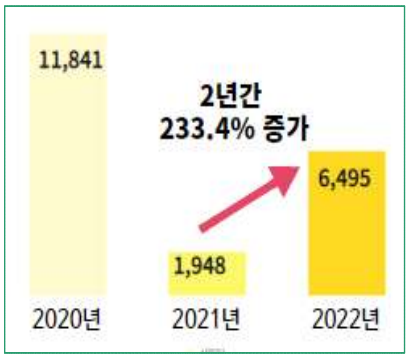
'예비군 훈련' 관련 민원은 **총 20,284건**('20.1월~'22.12월)

매년 민원 증가하여 **'22년은 전년 대비 233.4% 증가**

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은 **4~5월에 가장 많이 발생(34.8%)**

< 최근 3년간('20.1~'22.12.) 월별 평균민원 추이>

< 2020~2022년 연간 민원 증가율>



신청인·신청지역

신청인은 남성(98.5%)이 여성(1.5%)보다 많고, 연령별로 50대(62.1%), 20대(17.4%), 30대(8.2%), 60대(7.6%), 40대(4.5%) 등의 순

*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7,335건(전체의 85.5%),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6,964건(전체의 83.6%) 대상

신청지역은 강원 춘천시(51.1%), 광주 북구(6.3%), 서울 은평구(2.2%) 등의 순

*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7,225건(전체의 84.9%) 대상,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

처리기관

기관유형별로는 국방부가 31.6%로 가장 많고, 국민권익위 28.3%, 국가보훈처 13.2%, 대검찰청 5.8%, 병무청 4.3%, 경찰청 4.1% 등의 순

개선 요청사항

코로나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「예비군 소집훈련」이 재개됨에 따라 **예비군 훈련 개선요구**와 **교통, 훈련급식 불만 등**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**민원예보 발령 및 관계기관에 개선 요구**

⇒ ① 실거주지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도록 개선요청 ② 훈련이수실적 등 관리시스템 개선요청 ③ 훈련급식 품질 개선 ④ 한부자 가정 훈련변경 등

03 4월의 관심키워드 : 예비군 훈련

민원 사례

[주소지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실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]

-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강원도 ▽▽ 예비군 부대로 지정되고 있으니 기왕에 **가까운 거리에서 훈련**받을 수 있도록 요청 ('21.9월 서울병무청)
- **예비군 훈련 받는곳을 현재 실거주지 근처로 바꾸고 싶습니다.**
  제가 사정상 주민등록지는 전라북도 ◇◇시에 있는 외할머니댁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곳은 서울특별시 ○○구에요 ('21. 4월 전북지방병무청)
- 광주광역시 사람이 예비군훈련을 받으려고 휴일에 ◎◎까지 가야하나요? ('22. 6월, 국방부)
- 제 실거주지는 ▽▽▽읍이구요 발칸특기라 전투비행단으로 예비군훈련을 가야하는것도 압니다. 근데 가까운 ○○ 전투비행단을 두고 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▲▲으로 가야합니까? ('22. 8월 국방부)
- 동원예비군 부대로 가는 방법은 당일에 대중교통으로는 가는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고, **자차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최소거리 216km 3시간 이상 소요**되는 장거리입니다.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**교통비까지 사비로 지출**하고 있습니다. ('20.2월 경인지방병무청))

[예비군 훈련 이수실적, 소집통지서, 교통 등 관리시스템 개선 요청]

- **예비군 훈련 이수 누락 전산처리를 개선** 요청드립니다.
  이수한 훈련이 행정 처리 중 실수로 인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니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여 반영하기 바랍니다. ('22. 6월 국방부)
- 매 학기 시작할 때 마다 각 학교 예비군연대에서 복학생들 학생 예비군 신고하느라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입니다. **복학하면 학생 예비군이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**. ('21. 1월 국방부)
- 예비군들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훈련날짜와 훈련장소인데 통지서 상에는 '훈련장소(도착지)' 보다 '입영부대'가 먼저 표기되어 있음. 또한 훈련통지서임에도 불구하고 '입영일시' '입영부대'로 표시되어 있어 직관적인 정보 제공이 되지 않으니 **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양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** ('20. 8월 병무청)
-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종이로 발송하면 분실하기 쉽고 기간이 지나면 예비군훈련 일자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. **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도입** 요청 드립니다. ('21. 5월 국방부)
- **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하여**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하는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입니다.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는건데 왜이렇게 불편하고 불친절한가요? 부를때만 국가의 아들 훈련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처우 개선좀해주세요. ('22. 12월 국방부)

03 4월의 관심키워드 : 예비군 훈련

민원 사례

[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운영 확대]

- 휴일예비군 제도는 평일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 **특히 일요일에 열리는 예비군 훈련이 매우 부족**하여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여기저기 **전국을 돌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려움**이 있음. ('22. 6월 국방부)
- 휴일예비군 훈련이 전무합니다. 병원, 약국 등 개인사업자들의 생계유지와 국민 보건을 위해 **일요일 휴일예비군 훈련을 조속히 개설**해주시기 바랍니다. ('22. 5월 국방부)
- 자영업자라 일요일에만 쉬는데 일요일에는 예비군 훈련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.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인데 **일요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**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. ('22. 7월 국방부)
- 일요일 휴일 예비군 신청을 위하여 홍천 예비군 훈련을 30~35일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청자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. ('22. 8월 국방부)

[예비군 훈련급식 품질개선 요청]

- 점심식사 도시락을 신청하여 받았는데, **실망한 수준을 넘어 심각하고 처참**했습니다. 초등학생 급식수준도 안되는 양과 메뉴구성 등 대부분의 예비군 대원들은 절반도 먹지 않은채 다 잔반으로 버렸습니다. ('23. 3월 국방부)
- 도시락 뚜껑을 열어 식사를 해보니 굉장히 차가운 상태고, 양념된 닭요리는 마치 **생닭을 먹는 느낌**이었고, **떡도 굉장히 딱딱하여** 치아가 약한 사람은 치아가 손상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. 개선이 필요합니다 ('22. 6월 국방부)
- 누가봐도 이상하게 느껴질만큼 부실한 점심식사메뉴는 **전투식량과 보급라면,김치가 전부**였고 예비군에겐 선택권없이 모두가 같은 메뉴를 먹게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고 의문이 떨쳐지지 않습니다. ('22. 6월 국방부)
- 예비군에게 군대밥을 주고 배식을 해주는 취사병도 없고, 앞에서 고기를 많이 가지고 갔다는 말밖에 안하고, **점심을 국, 김치, 고기국물** 밖에 안주네요. 그렇게 점심을 먹으니 훈련받기가 너무 싫었습니다. ('22. 10월 국방부)
-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 업체에서 불러 식사를 진행하는데, 7천~8천원의 반찬 퀄리티는 **5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도 못미쳤으며, 차갑게 식은 반찬은 쓰레기를 먹는듯 딱딱하고 맛이 없었습니다**. ('23. 3월 국방부)

[한부자(父子) 가정 훈련 변경 요청]

- 현재 동원훈련 지정자인데 동원 미지정 변경 요청 및 동미참 훈련 변경 요청드립니다. **저처럼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은 동원훈련 자체가 불가**합니다. ('23.3.5. 병무청)

04 국민생각함[2] 설문조사 결과

□ 조사 개요

○ **(배경)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**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,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·유기되는 등 **신체적·성적·정신적 학대에 노출**

○ **(목적)**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**의료기관 출생통보제*** **도입**에 대한 **국민의견 파악**

* 출생통보제: 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에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,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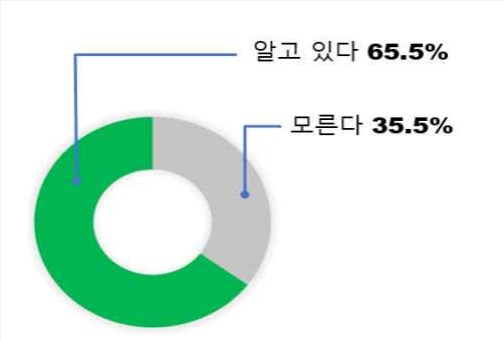
○ **(기간)** 2023. 2. 27. ~ 3. 13.

○ **(참여) 총 4,148명 설문참여** (일반국민 1,440명, 국민패널 2,708명)

□ 설문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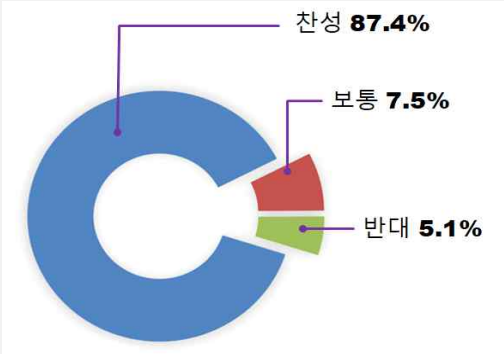
○ **출생통보제 인지 여부**

- **응답자 중 65.5%**가 출생통보제에 대해 '**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**'고 답변, '모른다'는 답변은 35.5%
- 인지응답은 유자녀 기혼자(69.2%), 무자녀 기혼자(67.3%), 미혼자(61.7%) 순



○ **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여부**

- **응답자의 87.4%**가 **찬성**한다고 답변하였고, 반대는 5.1%에 불과함
- (**찬성이유**) '**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**'(42.6%), '보건·의료·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'(34.5%), '아동학대 예방'(22.5%) 순
- (**반대이유**) '낙태 우려'(32.4%), '의료기관의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'(30%), '민간 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'(29%) 순



□ 기타 국민의견

○ **병원 부담 최소화** 필요, 병원-건강보험간 연계와 같이 **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필요**

○ 사망신고에도 적용, **사망통보제 시행도 필요**

○ **부모의 개인정보**가 노출되지 않도록 **관리 강화**, 악용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 필요

□ 시사점 및 향후계획

○ **법무부**는 작년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**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**하였으나,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해 **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**.
권익위는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.

2) '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'정책소통공간'으로,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가지 공공의제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좋은 생각은 함께 발전시켜 정부정책으로 만들어 갑니다. **(생각 → 참여 → 정책수립·제도개선)**

알 림 판

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

국민신문고 민원·제안 및 외부게시판·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(AI)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20년 2월 3일 개통하였습니다.

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www.pias.go.kr(업무망)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'사용자 계정신청 안내'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✓ **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(070-4108-3625)로 문의 요망**

담당자 안내

목 차	담당자	연락처
01. 민원 동향	윤태현 사무관	044-200-7285
02. 기관별 동향		
03. 4월의 관심키워드		
04.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	이철민 사무관	044-200-7274
시스템 이용 문의	HelpDesk	070-4108-3625